

# 협상하고 있다는데...안갯속 광주형일자리

### 현대차 재협상 광주시 특별보좌관 “발표할 내용 아직 없어” 당정 관심 여전...지역노동계 “재협상 결과 기다리고 있다”

노사 상생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 유치 협상이 지난해 12월 최종 협약서 조인식 취소 이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새해 들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지원의사를 재천명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광주시 역시 친노동계 인사를 2급 상당의 특별보좌관에 채용해 현대차 및 노동계와 재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27일 “지난 16일 박병규 전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으로 선임하고 현대차와의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협상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고, 박 특별보좌관을 선임해 현대차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등 시는 광주형 일자리 성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의 관심도 여전하다. 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대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상 준비를 마쳤다. 지난 22일 정태호 청와대 일차리수석도 “광주형 일자리가 ‘리소어링(외국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유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완성되면 현대차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공장을 지음으로써 리소어링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상 방식에 있어서도 광주시가 노동계와 협상을 한 뒤 이 내용을 현대차에 전달

하고, 반대로 광주시-현대차간 협상 내용을 노동계에 알리는 식의 기존 협상 방식과는 달리 읊어들서는 광주시 협상테이블에 노동계 인사가 직접 참여하면서 분위기도 일신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현대차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병규 특별보좌관은 “현대차와 협상을 그동안 계속 지속했고,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와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 다른 관계자도 “분명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협상 내용을 발표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설 연휴 이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의 한 축인 지역노동계 역시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 과정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차가 ‘단체협약 유예 조항’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지역노동계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없다는 것이다.

이날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지역 노동계와 광주시 간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광주시와 현대차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6일 현대자동차와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협약 체결식이 무산된 결정적인 원인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에 대한 지역노동계가 반발이다. 이 조항은 ‘신설법인 노사상생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세번째)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 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지역노동계는 3-5년간 임금단체협상을 유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26년만의 국내 투자, 추가 투자자 모집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현대차는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자기 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을 투입해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연간 10만대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투자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문 대통령 경제·민생 행보 ‘가속 페달’

### 양대노총 위원장 만남...주말 설 이후 개각 등 정국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경제·민생 행보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명절 밥상 민심’이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연초부터 집중해온 경제·민생 관련 일정을 이어가는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대기업·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쉼 없이 만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한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28일 대의원대회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제껏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로 사회적 대화의 틀이 온전히 갖춰지고,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이 조금씩 해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설 민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말인 26일과 휴일인 27일 별도의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정

국 구상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설 전까지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는 경제·민생 분야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 이후 일부 부처 장관들의 교체설이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도 조금씩 개각 고민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개각 대상으로는 문재인지부 출범 직후 임명된 ‘원년 멤버’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김영춘 해양수산·김현미 국토교통·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실제로 이 부처들을 중심으로 이미 휴일 후보군을 들여다보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휴일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검증이 철저해야 하는 데다 공직사회의 동요 등을 고려하면 설 이후 개각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체 개각 규모는 최대 10자리까지 거론되지만 이를 한 번에 단행하기보다는 총선 출마 장관들부터 차례로 교체하는 ‘순차 개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노총 오늘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사회적 대화 ‘분기점’

참여했던 광주형일자리 성사 도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의제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성사에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에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리는 이번 대의원대회 참가 대상 대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00명이다. 이는 지난해 정기 대의원대회보다 약 300명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900명 이상 대의원이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의원 과반수가 대회장에 나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 안건은 작년 사업평가와 결산,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2015년 총파업 투쟁기금 전환 사용, 정부 위원회 회의비 사용 관련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 중 올해 사업계획에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작년 10월 임시대의원대회에도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조직들이 대의원대회 ‘보이콧’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당시 내부적으로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공론화했다. 약 3개월이 지나 다시 대의원대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경사노위 참여 반대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두고 민주노총 내부의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는 게 노동계

안팎의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명환 위원장을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한 데는 이런 상황도 배경으로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며 노동계에 최대한 성의를 보임으로써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 핵심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인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면 사회적 대화는 힘을 얻기 어려워진다.

/연합뉴스

**초특가 한정세일!**

## 무안 → 캄보디아 앙코르왓 여행

### 2월 6일(수), 9일(토), 13일(수) 출발!

ARPF01 캄보디아/앙코르왓 4일,5일

# 69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 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유적지 관광, 압살라 민속쇼 디너뷔페, 특특이 탐승

※선착순 좌석 마감됩니다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됩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택시(상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산/불만처리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국제항공료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인건비 단계별 국가 지정 환율 | ●여행 유의 ●여행 자재 ●철수 권고 ●여행 금지